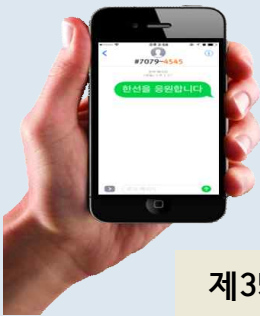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뉴노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과제  
[발제자] 광노성 한선재단 기술혁신연구회 부회장  
[일 시]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53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경제는 저성장 저소득으로 장기 성장률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외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이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로 경제와 첨단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그에 맞서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미·중간 갈등 격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짐을 덜고, 감소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의 유치를 위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생태계에 역행하는 정책은 과감히 보완 또는 개편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개혁, 우수인력 확보, 생태계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

## ◆ 뉴노멀 시대와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 ◆ 뉴노멀의 첫 번째 특징은 저출산 고령화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총 부양비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두 번째 특징은 저성장 저소득이다. 장기 성장률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큰 문제는 중위층의 감소이다. GDP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위소득 가구의 수입은 별로 늘지 않는다. 중산층은 감소하고 빈곤층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 코로나가 끝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이 결정한다.

## ◆ 과학 기술 혁신 생태계의 변화

- ◆ 신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BBIG(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기업의 주식이 각광받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미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많은 분야의 일자리에 큰 변동이 발생했다.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한 분야도 있었지만 인력 수요가 늘어난 직업도 있다. 프로그래밍과 같은 소프트웨어 직렬이 그 예이다.
- ◆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큰 변화가 생겼다. 탈중국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리쇼어링(해외로 나간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세했으나, 요즘은 니어쇼어링(생산단가 문제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기업이 중국을 떠나 우방국가로 가는 것)도 증가하고 있다.
- ◆ 미국 주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커질 것이다. 제4

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회사는 애플, 구글과 같은 미국계 회사이다. Data, Network, AI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부품은 CPU(Central Processing Unit)와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같은 하드웨어 역시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크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5G 통신시장, 인터넷, CPU와 같은 첨단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 ◆ 정부 정책의 문제

- ◆ 2020년 7월 14일 정부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재정 투자를 통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제도 개선 내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이나 구체적인 전략의 부족으로 관심은 뉴딜펀드에 맞춰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다.

## ◆ 정책 제언

- ◆ 정부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생태계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의 연구자와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부적인 기술 개발과 상업화는 현장 연구자와 기업의 몫이다.

### 가. 규제개혁

- ◆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성과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개인정보규제다. 최근 데이터 3법을 개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 전과 차이가 없다. 의료 규제가 심각하다. 코로나19로 부각된 원격의료는 고령층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이나 의료 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로 인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면 사전 승인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 그린 뉴딜 규제도 큰 문제다.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은 기업에 짐이 됐다. 최근 전기 자동차의 부상으로 수소차가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의 주요 수단인 원전의 축소도 큰 문제이다. 규제 완화를 위한 선허용 후규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나. 우수인력 확보

-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이 정보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 필요한 2,000~7,000명가량의 인력이 부족하다. 대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고 있고,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재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까지도 끌어들이 수 있어야 한다.

## 다. 생태계 전략

- ◆ 글로벌 생태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청년벤처는 글로벌을 지향한다. 국내에서 창업한 화장품 관련 기업인 미미박스는 미국을 찍고 대만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고, 네이버는 일본에 진출해 라인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글로벌 생태계에 역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허용되는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독일 자본의 ‘배달의 민족’ 인수 승인은 무한정 미뤄지고 있다.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게임 산업, 콘텐츠 시장, 인터넷 플랫폼 등 많은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정책이 이를 제약하고 있다. 규제정책을 비롯한 글로벌 생태계에 역행하는 정책은 과감히 보완 또는 개편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